

“쌀값·농산물 가격 정상화 비상행동 선언”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지난 25일자 통계청 산지쌀값 발표 관련

정부의 무능한 농정 운영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쌀값 하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한 어기구·문금주·문대립·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능한 농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의원들은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2,900원(80kg)으로 지난 5월 18만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15일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주 국정감사시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에는 정부 대책 발표 효과가 반영되어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 발표의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다.”며, “그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이원택 의원(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쌀값 하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서 이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광배한 것이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었다. 그런데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이 23년산 쌀값 하락(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만 원 이하로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4년산 쌀값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 원 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10월 한 달 평균 가격이 18만 5,30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 달 동안 21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평균 20만 원 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쌀값 하락을 야기한 농정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그동안 우리는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농장 대책, 풀꿈 대책, 품수 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귀담

아들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해 왔다. 결국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 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무능한 농정을 질타했다.

이에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둘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협조하라. 셋째,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려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져라.”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법안심사 연계(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및 입법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정부 여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쌀값 안정이야말로 식량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야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교류·협력 첫 걸음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내달 5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이 주관하는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오는 11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간 협력과 연대를 다짐하는 역사적인 첫 걸음으로, 전북도 차매우호 지역인 중국 장수성 및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단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개최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적화 주광주중국어총영사, 아미고 타카히로 주한일본 참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

대’라는 주제로 기초연설을 진행한다.

포럼은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3국 의원이 발표하고, 이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루어져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를 통해 3국 지방의회 간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례적 교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

도의회, 유일여고 학생 대상 ‘청소년 모의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 유일여고 1~2학년 3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당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최,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토론, 투표

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의 주제와 안건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안전훈련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자유발언과 복장관련 조례안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대변했다.

문승우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과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만호 기자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민생이 우선”

안호영 국회 한노위원장, 예산정책협의회 등 통해 전열 정비 “국감 지적 내용 바탕으로 환경·고용 예산 꼼꼼하게 따질 것”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안주·진안·무주군)는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를 나선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안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군지도를 포함한 도로 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화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유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쫓겨가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율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

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상임위원 예산 검토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점검한바, 실태대처팀 꼬여 있는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고달롭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그 희망과 답을 정치가 쥐어 하고 예산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끼고 삶의 버팀목이 될 민생 예산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범위 확대

민주 이성운 의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전북의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협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개정안에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하여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성운·정동영·조인철·윤준병·양부남·한준호·전현희·박희승·김문수·이재강·안호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원주교육 한마당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원주1)은 30일 완주창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에서 진행된 ‘원주교육 한마당’에 참석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 생태 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10대 정책과 미래교육 방향성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생산지정비사업
농어촌융복합유지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체 및 해외사업

KRC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